

초국가적 테러 대응, 정보 공유 등 국제협력 필수

글로벌에세이

최성주

원자력대학원 교수
전 주폴란드 대사



2개의 전쟁 중에도 테러는 계속

140명 넘게 사망한 지난 3월 22일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는 그 직전의 러시아 대선으로 5선을 확정지은 푸틴 대통령에게 악몽을 안겨줬다. 테러 직후 '이슬람국가-호라산(IS-K)'은 자신들이 테러를 주도했다고 발표한다. 반면에,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며 2년 넘게 전쟁을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번 테러가 우크라이나와 연관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인 설득력이 약하다. 항상 그렇듯이 테러는 방심과 부주의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2개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미-러 간의 긴장과 대결이 심화되고 있는 까닭에, 글로벌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IS는 2001년 9.11. 테러로 악명 높게 알카에다의 분파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정작 IS는 알카에다보다도 훨씬 더 잔인무도하여, 알카에다조차도 IS와 거리를 둘 정도다. 유엔에서는 IS를 대표적인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으로 분류한다. IS는 알카에다와 같은 수니파 계열이지만, 영토 확보 및 정부 조직, 화폐 발행 등을 통해 '칼리프 국가(Caliphate)' 건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알카에다와는 다르다. 그간 알카에다와 IS는 미국과 서방, 러시아 등의 지속적인 고강력한 군사작전으로 세력이 많이 위축되었다. 이번 모스크바 테러를 주도한

IS-K는 2015년 1월 반(反)탈레반 조직이 IS에 충성을 맹세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태양의 땅'을 의미하는 '호라산'은 지리적으로는 이란 동북부 및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지역 등을 포함한다. IS-K의 대표적인 테러 행위로 2021년 8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틈탄 카불 공항 자폭테러, 그리고 올 1월 이란 술레이만 사령관 추모식 자폭테러가 있다. IS-K가 공언하는 주적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슬람의 적인 기독교를 상대로 성전(聖戰)을 벌일 것을 촉구한다. 또한, IS-K는 같은 이슬람이지만 종파가 다른 이란을 비난하고 공격한다. 이란은 수니파에 비해 소수이지만 강경한 성향인 시아파의 맹주다.

IS-K는 러시아에 대한 원한과 증오를 키워왔는데, 그 뿌리는 1979년부터 10년간 지속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에서 찾을 수 있다. 동서 냉전 및 소련 해체 후, 러시아의 자치공화국인 이슬람권 체첸은 러시아로부터 분리독립하기 위해 1994-96년간 무력항쟁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무자비한 대응은 러시아에 대한 이슬람교도들의 적대감을 심화시킨다. 그리고, 2011년에 시작되어 여전히 진행형인 시리아 내전은 IS 등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의 강한 불만을 초래한다. 러시아는 전략적 선택 하에, 시리아의 아사드 독재정권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슬람을 믿는 타지크인과 우즈베크인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에 대한 러시아의 차별대우도 이들의 감정을 악화시킨 요인이다. 이번 테러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면서, IS-K와도 맞서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게 됐다. 그런데,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은 러시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국 및 유럽 등 전 세

계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올 7월 올림픽을 주최하는 프랑스는 보안태세를 최고단계로 격상시키면서, 테러 위협이 파리 센강 개회식 행사를 포기하겠다고 말한다.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일은 모든 주권 국가의 공통적 과제다. 초국가적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 등 국제 협력이 필수다. IS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테러 지시 및 자금 확보, 테러리스트 총원에 나서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지정학적인 긴장이나 대결을 넘어선 글로벌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모스크바 테러가 발생하기 몇 주 전, 미국이 테러 위협 첩보를 러시아에 극비리 제공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테러를 주동했고 영국과 미국이 공모했다고 계속 주장한다. 푸틴 특유의 음모론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술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국가 행위자들이 자행하는 테러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정보공유와 함께, 평시 대테러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사이버 협력도 지속 강화할 일이다. 테러는 예고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평소 주변으로부터 모종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한 실례는 9.11. 테러 전에 미국 플로리다 비행학교에서 훈련받은 한 테러리스트의 경우다. 테러 발생 후, 이 비행학교 관계자는 '오직 이륙(take-off) 기술만을 반복적으로 익히던' 그 훈련생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한다. 정부는 물론, 기업과 시민 모두가 평소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어리석고도 고통스러울 뿐이다.

社說

빈곤노인 돌봄 위한 정부 지원 더 늘려야

오늘부터 경로당 주5일 식사

정부가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경로당에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 미비한 공적연금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은 OECD국가 가운데 1위로 올라갔다.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 비록 밥 한 끼로 미흡하지만 우리 사회를 지금의 수준으로 키워온 노인 세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그나마 다행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경로당은 6만9000개로, 1일부터 기존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 5만 8000곳에 대해 양곡비와 부식비, 인력 등을 지원해 평균 3.4일이던 식사 지원을 주 5일로 늘리기로 했다. 식사를 제공중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별 연간 8포 지원되는 양곡비를 추가로 4포 늘려 연간 12포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도 추

진할 계획이다.

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오랜 기간 국가 발전에 기여한 노인의 삶은 매우 척박하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지난 2021년 37.7%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도 지난 2020년 34.9%던 1인 가구 비율이 오는 2050년이면 41.1%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90세를 넘어 100세까지 살아갈 시대, 노인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개인을 넘어 국가적 불행이다.

가족의 돌봄은 커녕, 사회적 부양마저 빈약한 상황에서 노인 세대가 기댈 곳은 정부와 지자체 뿐이다. 지금은 식사에 머물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빈곤 노인을 위한 공적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노인세대에 소일거리나 일거리도 제공해야 한다. 노인세대가 겪는 빈곤이나 무기력을 노인들 개개인이 해결할 문제로 방치하는 것은 '노인 난민'을 부추겨 결국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5년째 내리막' 광양항 활성화 시급하다

정부 투포트 정책 유명무실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 2018년 정점을 찍은 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부산항과 광양항을 양대 축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투포트 정책(Two-Port)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만큼, 정부 차원의 활성화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8년 240만8000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5년째 감소하고 있다. 2018년 대비 2019년 237만8000TEU(-1.2%), 2020년 215만9000TEU(-9.2%), 2021년 212만5000TEU(-1.6%), 2022년 186만4000TEU(-12.2%), 지난해에도 186만3000TEU(-0.1%)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지난해 부산항(4.2%)과 인천항(8.4%) 모두 전년보다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지난 1985년 수립된 정부의 투포트 정책에 따라 부산항과 양축을 이뤘던

광양항이 지위를 잃은 지 오래다. 광양항은 지난 2015년 인천항에 추월당한 뒤 두 항간의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2위 탈환'도 그만큼 멀어진 셈이다. 광양항의 침체는 과거 정부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최근 10년새 부산항과 인천항에는 투입된 국비가 2조 6000억 원이 넘지만, 광양항은 3900억 원에 불과하다. 경쟁구도에 있던 부산·인천항이 매년 호황을 누린 반면 광양항만 '나홀로 불황'을 겪고 있다. 여수산단은 석유화학제품 세계 시장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운사들의 항로 이탈과 노후된 시설에 대한 상대적으로 더딘 투자가 계속돼 왔다.

광양항은 부산항과 인천항에 물동량을 지속적으로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만큼 광양항의 경쟁력 확보가 절실히 보인다. 광양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육성 전략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정부는 투포트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광양항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서석대

프랑스 루이 14세는 1712년 스페인의 식민지인 칠레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아메데 프랑수아 프레지어 중령을 스파이로 파견한다. 프레지어는 칠레의 토종 딸기를 연구하는 식물학자로 위장했다.

프레지어는 식물학자처럼 풀과 나무를 조사했다. 조사 내용은 수첩에 기록됐는데 물론 칠레 지역의 정치, 군사적 정보에 대한 암호들이었다. 식물에 대해 아는 것은 없었으나 덕분에 이것 저것 배우게 됐고, 몇몇 인상깊은 것들은 메모하고 종자를 채집했다. 루이 14세는 프레지어가 보낸 정보를 보고 매우 만족했다고 한다. 1714년 프레지어는 임무를 마치고 귀국할 당시 칠레산 야생딸기 종자를 가지고 왔다. 지금 먹는 딸기의 역사는 국가 간의 치열한 스파이전에서 유래했다.

프레지어가 가지고 온 딸기는 진짜 식물학자와 육종학자의 연구 끝에 1764년 거의 50년 만에 신품종 딸기로 재탄생하게 된다.

한국에 딸기가 보급된 것은 불과 100여년 전이다. 유럽에 퍼져나간 딸기는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일본의 개량딸기인 '육보'나 '장희' 품종이 국내 점

유율 86%(2002년 기준)를 차지했다. 당시 한국 품종은 1%에 그쳤다. 연간 60억원의 로열티 사용료가 일본으로 빠져나갈 위기에 있었으나 2005년 한국산 토종 재배품종인 '설향'이 큰 성공을 거뒀다. 10년 뒤인 2015년 국내 점유율이 90%에 육박했다. 하지만 단일품종 탓에 전염병이 확산되자 품종 다양화를 통해 현재는 국내 품종은 20여개에 달한다.

10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딸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품종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해 수출액이 6467만 달러(2021년 기준)로 딸기 수출국 세계 5위에 올랐다.

최근엔 담양 딸기가 해외에서 첫 로열티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담양군은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TES 그룹과 '담양산 딸기 죽향·메리퀸 로열티 계약'을 체결했다. 군은 계약을 통해 향후 10년간 딸기 재배 기술을 지원하고 1억원의 로열티를 받는다. 담양딸기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이어 몽골, 베트남에도 수출을 했고, 중동 유럽 미국에 딸기 원모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첫 로열티를 받는 담양 딸기가 전국 3대 주산지를 넘어 '세계화'를 향해 전진하길 기원한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36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